

# GR태풍 대비하는 독일의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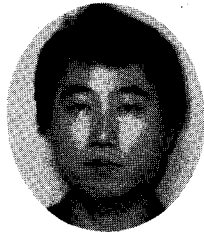
**지**난해 10월 독일 정부의 초청으로 독일 환경부, 정당, 환경연구소 등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환경선진국이라는 독일이 그린라운드 태풍이 밀어닥치고 있는 지금 환경 문제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해결 방향을 모색하고 있을까가 필자에게는 큰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20일 동안 곳곳을 둘러보면서 내린 결론은 독일이 이미 오래 전부터 생태 친화적인 새로운 사회, 경제 구조의 구축을 시도해 왔고, 지금은 이를 완성시키는 단계까지 와있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세계, 시장 구조, 에너지와 토지 이용, 가격,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환경 파괴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무거운 비용 부담을 가함으로써 경쟁력에 밀려 도태되도록 한다는 것이 환경선진국 독일의 환경 철학이다.

에너지와 공해물질을 많이 발생시키는 산업과 제품에 무거운 세금을 물린다든지, 공해 상품이 시장에서 차별을 받게 만든다든지, 에너지 자체에 공해발생 비용으로 탄소세를 물려 대체에너지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시킨다든지 하는



申東浩

(한겨레신문 생활환경부 기자)

것 등등이다. 이런 환경 정책은 독일 환경부가 선언하고 있는 3가지 기본 환경 정책 정강 즉, 오염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 둘째 공해가 발생한 다음 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한다는 원칙, 셋째 국가 산업체, 환경단체가 환경 문제 해결에 협력한다는 원칙 아래 수행되고 있다.

실제로 독일의 산업체들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비용과 시설을 환경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또 정부는 모든 상품에 '생애주기 평가'라는 제도를 도입해 원료생산에서부터 조립,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드는 비용을 돈으로 환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좋은 점수를 받은 제품에는 환경마크를 부여하고, 비용과 공해물질을 많이 발생시키는 상품은 도태되도록 정부가 제조 기준을 만든다.

또 환경부는 환경단체에게 연구 용역을 맡기는 방법으로 연간 약 7백억원의 국고를 지원한다. 정당들은 핵발전소 문제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번씩 모임을 갖고 있다.

정부가 환경 기준을 설정하고 일정량 이상 공해물질을 배출하면 처벌을 가하는 단순한 규제 의존 일변도의 우리나라의 환경 정책과는 철학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달랐다.

이처럼 강력한 구조개혁적 환경 정책이 독일의 공기와 물을 맑게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공해물질을 많이 배출해오면 독일 기업이 국내에서 견디지 못하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규제가 허술한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등 독일 경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대표적인 공해업종인 종이와 펄프 공장은 아예 문을 닫았다. 자연 수입 종이에 의존하다보니 독일의 종이값과 책값은 세계적으로 비싸기로 유명하다.

또 독일기업들은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알바니아 등 동유럽과 인도네시아 등에 산업폐기물을 마구 수출, 세계 최대의 쓰레기 수출국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비싼

폐기물은 국내 처리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몰래 외국에 갖다가 버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환경 정책의 강화가 독일의 산업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놓고, 정당과 환경단체들 사이에서는 최근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사실 이 논쟁은 통일 이후 장기 불황에 빠진 독일로서는 국가의 장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집권 기민당은 환경을 살리려면 경제가 후퇴한다는 것이고, 사민당은 환경 보존을 해도 경제가 후퇴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인 반면 녹색당은 환경 투자가 오히려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주장이다.

녹색당은 세계 최강인 독일의 환경기술을 바탕으로 환경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면 독일 내의 실업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말하자면 가장 좌파 계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녹색당이 후진국의 입장에서는 환경제국주의의 진원지가 되는 셈이었다.

이런 녹색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독일은 유럽공동체가 탄소세를 도입하는데 가장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리우회의 등에서 각종 환경 관련 국제협약을 강화하는데서도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또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한 독일의 환경기준을 다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확대시켜나가도록 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래야 독일의 환경 관련 설비와 설계 기술을 다른 나라에 팔 수 있기



△ 독일환경감시용항공기가 북해와 발틱해의 석유오염을 감시하고 있다.

**녹색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독일은 유럽공동체가 탄소세를 도입하는데 가장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리우회의 등에서 각종 환경 관련 국제협약을 강화하는데서도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또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한 독일의 환경기준을 다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확대시켜나가도록 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때문이다.

환경선진국 독일을 비롯해 일본 그리고 클린턴 행정부 등장 이후 '북미무역자유지역' 협정체결을 계기로 환경에 부쩍 관심을 갖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은 현재 '그린라운드'라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로 선진국이 경쟁력이 있는 농산물과 서비스 등 모든 상품과 용역에 대해 시장을 개방시켜 놓고는 개도국이 경쟁력 면에서는 앞선 공해 유발형 저급기술 제품에 대해서는 그린라운드로 빗장을 걸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해유발형 저급기술 제품 수출에 국가경제의 상당부분을 의존해 온 한국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하나, 다시 우리나라에 왔을 때 필자로서는 이것이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